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몫 추천위원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해져
의결정족수 7명 중 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7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가량 공수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뉴스1

“지방자치법 개정안,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디딤돌’”

도의회,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환영” 의사 표출
의회 위상 정립·본연의 역할 수행서 높이 평가
“미진한 부분 법·제도적 근거 마련토록 노력할 것”

전북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며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적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임과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도의회는 “비록 이번 지방자치

법 전부개정에 주민자치회,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과 지난 30여 년간 실망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의원,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미진한 부분을 정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 출발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유호상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정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전주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



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 안전사고는 증가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할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

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의식이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위한 전북도 역할 규정

홍성임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국외 유출 19만3136점에 달해”
전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의원이 제 377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전북도에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환수된 문화재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외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가 19만3,136점에 달한다”며 “이 많은 문화재들을 중앙정부 주도로 환수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문화재청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16년 ‘문화

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광역 7개, 기초 1개의 자치단체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의 경우 실태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전북도에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전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장, 적십자회비 전달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1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전북지사 박종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송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소의계층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든 답은 현장에... 군민의 편에서 살필 것”

성경찬 도의원, 고창 곳곳 의정활동 ‘활발’
고창~내장C 지방도 공사 현장 등 찾아 점검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이 고창군 곳곳을 누비며,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경찬 의원은 10일 오전 고창~내장C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성경찬 의원은 “공사 기간이 2022년 9월로 늘어난 것과 세륜장미비, 성두 삼거리 회전교차로 문제를 지적하며 “고창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완공 시점을 앞당기고, 지적사항을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고창군 이주여성 도

울센터 현관식에 참석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가족 문제가 발생되고,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문자 등으로 가족 문제를 점검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주여성 도움센터’로 지정해 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경찬 의원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생활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편에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면서 “고창군의 발전과 고창군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